KERI Brief 13-05 2013-03-25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

김정수 / 한국경제연구원 전문위원 (econopal@keri.org)

2013년 2월 13일 미국과 유럽이 TTIP(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협상에 들어갈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반(33조2600억 달러, 세계 GDP 47%)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교역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두 지역의 경제통합은 구미 선진국의 경제적 부흥과 더불어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TTIP의 실현은 두 지역간의 경제통합, 역외국에 대한 차별 심화와 환대서양 경제질서의 글로벌 규범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이미 이들 두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TIP는 한국에 대해 국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신 시장의 확대라는 종래 방식의 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글로벌 경제규범에의 대응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면서도 이 세 가지에 동시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한·중·일 FTA가 시사하는 바 심대하다. 첫째, 세계 교역 1위, 3위, 8위 교역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3국이 현재 겪고 있는 저성장의 틀을 깨고 안정성장의 길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난 20년 넘게 세계경제를 견인해 온 동아시아의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 한·중·일 FTA는 동북아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경제규범과 질서를 환대서양 경제모델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질서의 대안으로 글로벌 경제 커뮤니티에 제시할 수 있다.

- 2013년 2월 13일 미국과 유럽이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협상에 들어갈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

1. TTI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협정이란?

■ **두 거대경제는 이미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있음.**

- 두 지역은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약 반(33조2600억 달러, 세계 GDP 47%)을 생산하고 있고, 세계교역의 30%를 담당하고 있음.

■ **양 지역은 상품 교역뿐 아니라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 여타 지역보다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글로벌 경제 속의 환대서양 경제권>[1)]

- 세계 GDP의 54% 차지(2011년 기준)
- 세계상품수출의 28.2%, 세계상품수입의 33.4% 점유(2009년 기준)
- 세계 직접투자 누적 총액의 62.9%, 세계 해외투자 누적 총액의 75.3%
- 미국의 대EU 수입의 61%, 대EU수출의 31%가 기업내(intra-firm) 교역

– 양 지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량은 하루 27억 달러에 이름.

– 미국의 대EU 서비스 수출은 미국의 총 서비스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대EU 서비스 수입은 미국의 총 서비스 수입의 60%를 차지함.

■ **양 지역간 거래의 긴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내(intra-industry) 및 기업내 교역 비중에도 반영됨.**

– 미국의 해외투자기업의 반이 유럽에 주재하고 있고, 미국 해외보유 자산의 60%가 유럽에 있음.

– 유럽 해외자산의 75%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음.

– 미국기업의 EU 투자는 1조9천억 달러, EU기업의 미국투자는 1조6천억 달러

■ **양 지역은 2차 대전 후 구축된 브레튼우즈(the Brettonwoods) 체제를 중심으로 반 세기 넘게 세계경제체제를 주도해 왔음.**

– 이들은 IMF, IBRD, WTO 등 국제기구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경제질서의 주도적 제정자 역할을 담당해 옴.

– 또한, G-7, G-20 등 국제적 정책현안에 관한 포럼도 주도해 온 양대 산맥임.

2. TTIP 협상 추진 경위

■ **1990년 대의 양 지역간 경제통합 논의는 비전 또는 부문별 경제마찰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1995년, 독일 및 영국 외무부 장관, 미국 AFL-CIO 회장 및 양 지역 재계가 환대서양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함.

– 1998년, EU가 '신 환대서양 의제'(New Transatlantic Agenda) 비전을 제시함.

– 동년, 양 지역은 통신 기기, 제약 제조 과정 등에 관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협의.

1) 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 A New Era for Transatlantic Trade Leadership, a Report from the Transatlantic Task Force on Trade and Investment," February 2012.

■ **2007년, 두 지역은 규제장벽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료급 환대서양경제위원회(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을 설치**

- '환대서양 경제협력의 투명성과 효율을 제고하고, 국제교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 감축을 가속화' 한다는 목적. 'EU와 미국 간의 환대서양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한 기본 틀'을 협약을 만드는 등 활동을 하고, 일부 분야에서 진전도 있었으나, 총체적인 자유화나 제도 조화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함.

■ **2011년 11월, '일자리와 성장을 향한 고위급 실무그룹(HLWG: High Level Working Group on Jobs and Growth)를 설치**

- '호혜적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EU 간 교역 및 투자를 증진시킬 정책과 조치'를 공동 모색토록 함.
- 2012년 6월 HLWG 중간보고서 제출
- 2013년 2월 4일, EC가 유산에 의한 소고기의 오염제거처리와 양돈용 미국산 돼지 수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 협상 개시의 걸림돌을 제거함.

■ **오바마 2013년 2월 12일 올해 시정연설에서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와 더불어 TTIP도 추진할 의사를 표명**

- 2013년 2월 12일 HLWG 최종보고서 제출
- 2013년 2월 13일 양 지역 TTIP 협상 개시 의사 표명

3. TTIP 협상추진의 배경

『불황과 실업』

■ **TTIP를 추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 지역의 저성장과 특히 2008년 금융위기 후의 불황임.**

- 극심한 불황과 고실업 때문에 새로운 성장 기회의 확보가 절실한 과제임.

■ **경기 부양을 위한 통제 정책수단의 고갈: 경기부양과 금융 안정 위해 막대한 재정 투입의 결과**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 지역은 지속가능성이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고, 수차례에 걸친 정책금리 인하로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에서 통화의 양적완화(QE)를 실시하고 있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종래의 정책수단은 이미 소진된 상태.

■ **TTIP는 재정 및 통화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제활성화 방책임.**

- "취약한 경기회복세와 재정긴축이라는 현 상황에서, 자유화는, 대서양 양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재정적자 감축 전략을 저해함이 없이, 미국과 유럽에서 공히 절실한 경제성장을 촉발하고, 각각의 수출부문을 증진하며,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2)]

『쌍무간 고질적 무역분쟁』

■ **양 지역은 서로 간에 농업시장 개방과 서비스 부문의 투자를 중심으로 수십 년간 상호 경제적 마찰을 빚어왔음.**

- 농업보조금, 항공기 제작 보조금, 검역기준을 근거로 한 수입규제 등 그들의 분야별 입장 차이는, 한편으로는 WTO의 전신인 GATT체제 아래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UR) 또는 도하라운드(DDA) 등 다자간무역협상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기도 했음.
- 다른 한편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에는 그들간의 농산물 교역 관련 마찰은 빈번하게 공식적인 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절차에 따른 제소의 대상이 되어 옴.
- 민감분야에 대한 고관세가 남아있고, 안전 및 환경기준이나 투자규제 등, 양 지역간의 제도적 차이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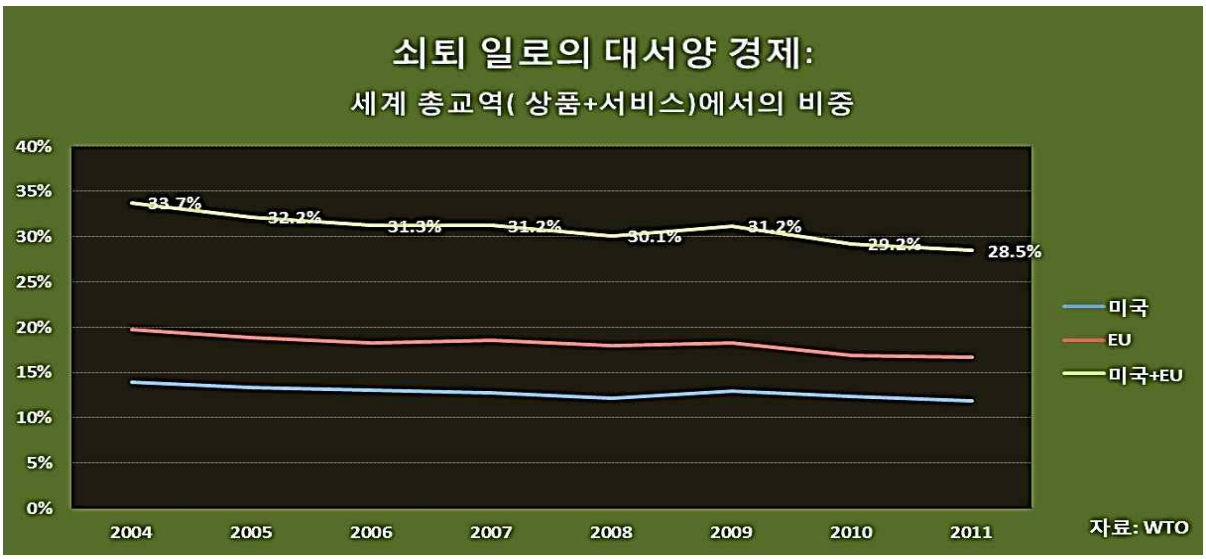
■ **TTIP는 양 지역간의 장기적 분쟁의 현안에 관한 쌍무적 협상의 공식 채널이 된 것임.**

『서방세계의 쇠퇴』

■ **근년 환대서양 경제권의 쇠퇴가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고착됨.**

- 이에는 국제경쟁력 약화(미국과 유럽)와 경제체제적 경직성(유럽) 등 자체가 가진 성장동력 상실도 작용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BRICS 등 신흥국(Newly Emerging Economies)의 급속한 부상이 더 심대하게 작용하고 있음.

2) Riccardo Alcaro and Emiliano Alessandri, "A Deeper and Wider Atlantic," Istituto Affari Internazionali, Document IAI 13/01, February 2013.



■ **IMF의 추계에 따르면 2030년이 되기 전에 중국과 인도를 합한 경제적 비중이 미국과 EU 등 환대서양 경제권을 능가할 것임.**

"미국과 유럽이 맞고 있는 재정적 도전과제와 함께, 이들 동태적 추세들은 장기적으로 북대서양 주체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면서, 중기적으로도 한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그들의 리더십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3)]

■ **환대서양 경제권의 상대적 쇠퇴는 구미 선진권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짐.**

- 생산 규모, 국제교역의 비중 등 경제적 기준뿐 아니라, IMF 및 IBRD 등 국제경제기구에서의 발언권 축소.
- G-7 등 선진국간 정책협의체의 실효성 상실, G-20 등 글로벌 정책협의체에서의 위상 저하 등에 반영되고 있음.

■ **이러한 글로벌 경제사회 안에서의 상대적 내지 절대적 지위의 약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비전으로 제시된 것이 TTIP임.**

『글로벌 경제규범의 변질』

■ **2차대전 이후 구미제국이 창안·구축하고 관리해 온 자유 시장체제에 근거한 국제경제질서는 근년에 들어 신흥국에 의해 도전 받고 있음.**

■ **TTIP는 구미 선진권이 다시금 세계경제질서의 주도자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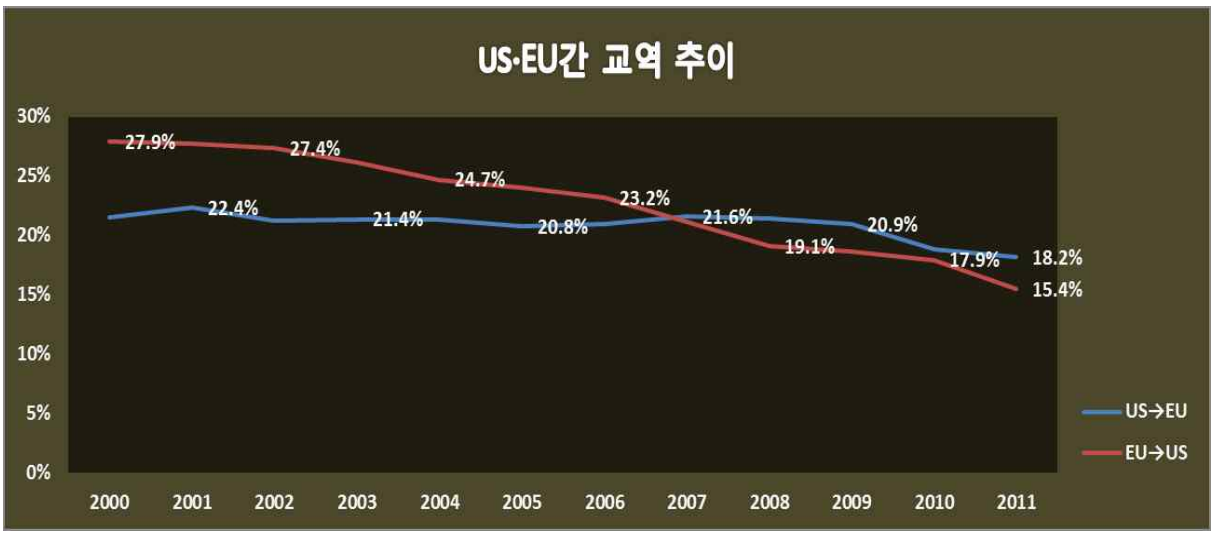
3) Riccardo Alcaro and Emiliano Alessandri (2013)

4. 협상의 주요 내용

■ **TTIP는 '양 지역이 공유하는 글로벌 교역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a) 시장접근(개방), b) 규제와 비관세장벽, 그리고 c)규범, 원칙 및 새로운 협력의 형태 등 3 분야에 걸쳐 야심 찬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시장접근**』

■ **시장접근 협상은 '미국이나 EU가 맺은 과거 어느 무역협정을 통해 성취한 것 이상의 시장접근'의 일괄 타결을 지향하고 있음.**



① 관세(상품교역)

■ **관세협상을 통해 양 지역은 '쌍무교역의 모든 관세의 철폐를 지향하되, 발효 시에 상당한 관세 철폐를 이룩하면서 동시에 가장 민감한 부문을 제외한 모든 관세를 단기간 안에 감축해 나간다'는 것을 목표로 삼음.**

- 현재, 두 지역의 관세는 약 3% 수준임. 미국의 (최혜국MFN 기준) 단순평균 관세율은 제조업 분야가 4%, 농업분야는 9%임. EU는 제조품 관세는 4%, 농산품은 18%에 이름.

■ **시장접근협상의 관건은 농산물 시장의 상호개방임**

- EU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함. "무역장벽을 100% 제거할 필요는 없다."(모레이라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

② 서비스교역

■ **양 지역은 협상을 통해, '각 지역이 그 동안 체결한 FTA 협정으로 성취한 최고 수준의 자유화를 이룩하되, 특정 부문의 민감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잔존해 온 시장접근 장벽을 다룸으로써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음.**

- 2011년, EU의 미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1370억 달러(EU 총 서비스 수출의 25%), 미국의 EU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1350억 달러(미국 총 서비스 수출의 50% 상회).

③ 투자

■ **TTIP 투자협상을 통해, '각 지역이 이제까지 협상한 최고 수준의 투자 개방과 투자보호 규정을 포함'하도록 함.**

- 양 지역 상호간 자본거래액 한해 32조 달러, 하루 870억 달러.
- 초점은 시장개방, 규제의 투명성, 공정경쟁. 중복규제, 규제간 차이 등이 문제.

④ 정부조달

■ **TTIP의 정부조달 협상으로, '내국인대우를 원칙으로, 모든 단계의 정부의 구매에 관한 시장접근 기회를 상당한 수준 개선함으로써 사업기회를 개선'해 가기로 합의함.**

- 그 동안 EU 등 해외기업은 미국 정부, 특히 주 정부의 구매에 대한 시장접근이 외국기업에게 사실상 거부되어 있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명해 왔음.

『규제와 비관세장벽』

■ **양 지역은 위생, 안전 및 환경보호 기준 등 '국경 내(behind-the-border)' 장벽에 대처하는 새로운 수단을 모색하기로 함.**

- 양 지역은, 미래의 규정 간의 조화(harmonization)과 현존 규제의 동등성(equivalence[4])또는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등으로 호환성을 제고함으로써 규제의 차이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함.
-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규제문제는 농산품과 식품이 중심이 되어 왔지만, 미국과 EU 간에 규제의 차이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야는, 농산품 및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기계,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음.

4) 동등성은 수출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타방 당사국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하는 것

◈ TTIP협상에서 미국이 제기할 수 있는 규제의 예[5)]

의견제시 단체	통상현안 및 제안 사안
양 지역의료기기업계단체의 공동제안	의료기기의 품질보증제도의 중복 감사
미국 냉동식품협회	식품첨가물의 사용제한
미국제조업협회(NAM)	국제기준의 정의, WTO의 TBT협정에 의거해야.
미국 사료산업협회	동물용 사료의 규제
미국 정제협회	동물성 원료의 규제
미국 Personal Care 제품평의회	화장품 규제
미국 식육협회, 미국 육우생산자 및 우육협회	식육 수입규제
미국 규격협회	TBT 규정은 적어도 한미FTA의 TBT규정 수준으로 엄격히 제정해야 함.
미국 돈육생산자협의회	돈육 수입규제
유럽 Self Medication 협회, 미국 소비자 Healthcare 제품협회	의약품 데이터 보호, 제조시설 중복 감사

① 위생검역기준: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양 지역은 '각 지역의 위생검역기준이, 부당한 지연 없이, 과학, 국제기준 및 과학적 위험평가에 근거하고,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로만 적용하며, 투명한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함.**

- 위생 검역 기준이 교역장벽으로 작용한 것은 미국보다는 EU가 더 심각함. 유전자 변형 작물, 클로라인으로 무균처리한 닭고기, 수지(獸脂)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 연료의 수입허가 등 수년간 분쟁의 대상이 됨.

② 비관세장벽

■ **양 지역은 '불필요하고 부담이 되는 검사와 증명 요건을 완화하고, 규정 일치 여부를 평가(conformity assessment)하는 각 지역 기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며, 규정 일치 평가와 표준화에 관해 글로벌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함.**

-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기준 통일, 미국 정부조달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비관세장벽에 대한 EU의 관심

5) JETRO, 『通商弘報』 2013년 2월 6일 http://www.jetro.go.jp/biznews/attachment/5111d1a44b320.pdf

『글로벌 교역 규범 강화』

■ **협상을 통해, '쌍무간 교역과 관련 있는 수개 분야뿐 아니라 다자간교역체제의 전향적인 강화에 기여할 교역 규범을 개발'하기로 함.**

- 양 측은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여타 특권, 원자재에 관한 수출규제, 국산화 요건 등', 새로운 형태의 비경쟁적 정책과 관행에 주목함.
- '이들 분야에 관한 쌍무간 협정은 규범 기반(rules-based) 다자간교역체제를 강화하고, 환대서양 협정의 시장접근과 규제 개선에 기여할 것임.'

■ **글로벌 교역 규범 중 TTIP 협상의 대상 정책분야**

- 경쟁정책: 미국의 경쟁정책은 소비자후생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EU는 산업의 경쟁구조 유지가 주 관심.
- 정부가 부여한 특혜를 받는 국유기업 및 여타 기업
- 국산화 장벽: 국내 제조업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 지원, 육성하는 조치, 또는 수입제조품과 서비스 및 외국소유 또는 해외개발 지적재산권을 불리하게 하는 지적재산권
- 중소기업 정책

5. TTIP 타결의 파급효과

■ **TTIP가 가져다 줄 막대한 혜택을 염두에 두고, 양 지역은 가급적 빠른 시일(금년 봄) 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내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 짓기를 희망하고 있음. 그러나 협상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 타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 첫째, 양 지역 공히, 각각 역내에 TTIP와 같은 거대협정에 관한 일관성 있는 사회적 합의를 신속하게 도출하는 체제가 결여되어 있음.
- 둘째, 양 지역이 협상의 자리에서 대할 교역 현안들은 수십 년 동안 양 지역 간에 마찰을 빚어온 것들임.
- 수십 년의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현안들이 해결이 얼마나 어렵고, 그 현안들에 관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음.
- 그 현안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이유들이 문화 및 정치적 성격의 것들로서, TTIP이 가져다 줄 경제적 혜택만으로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임.

『쌍무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

① 비관세 장벽 철폐 효과

- 비관세장벽은 자동차 분야의 비용을 27%, 전자제품 및 통신장비의 비용을 20%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2001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6]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을 50% 감축하는 경우, EU의 GDP가 1580억 달러(0.7%), 미국에 대한 수출은 2% 증가함.

  : 자동차, 화학제품 그리고 제약 분야 등에 혜택이 집중될 것임.

- 미국의 GDP가 530억 달러(0.3%), EU에 대한 수출은 6%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전자제품, 화학제품, 제약 그리고 금융서비스 분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야임.

② 관세철폐 효과

- 2009년 연구[7]에 따르면, 환대서양 자유무역으로 2027년까지 매년 미국의 대EU 수출은 3.76%, EU의 미국 수출은 5% 증가할 것임.
- 2011년 연구결과[8]에 따르면, 환대서양 자유무역은 미국의 GDP를 0.99~1.33% 늘리고, EU의 GDP 성장에 0.32~0.47% 기여할 것임. 또 미국의 대 EU 수출은 17%, EU의 대 미국 수출을 18% 증가시킬 것으로 추계됨.

  → 미 상공회의소, 5년 내에 양 지역간 교역 1200억 달러 증가

  → USTR, 장기적으로 양 지역 교역 4590억 달러 증가, 1300만개 일자리 증가

③ 서비스교역 자유화 효과

- European Services Forum[9]에 따르면, 현존 교역장벽이 철폐된다면 쌍무간 서비스 교역을 10~20% 확대시키며, 17만~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임.

『글로벌 경제체제의 재편』

① 자유무역협정 확산의 가속화

■ **TTIP의 타결뿐 아니라 그 협상의 출범과 진전으로도, 세계 여타 지역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을 확산시키고 가속화 하는 효과를 가질 것임.**

- 그 첫 번째 대상인 TTIP는 미국에 의해 TPP의 협상을 가속화시키는 지렛대로 활용될 것임.
- 이미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TTIP의 차별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TPP의 타결을 서두를 것이고,

---

6) ECORYS, "Non-Tariff Barriers in EU-US Trade and Investment: An Economic Analysis,"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2009.
7) Frederik Erixon and Gernot Pehnelt, "A New Trade Agenda for Transatlantic Economic Cooperation,": Brussels: ECIPE Working Paper No. 09/2009.
8) Jarolim Antal, "Transatlantic Free Trade Agreement-Still Alive or Dead Concept in EU-US Relations?,": International Jounal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y Studies Vol3, No 2, 2011.
9) Directorate-General for External Policies, "Ways and Means towards a Future EU-US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European Parliament, DG EXPO/B/PolDep/Note/2012_302, October 2012.

- 일본의 경우처럼 그 협상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나라들도 스스로 TTIP 참여로 입장을 전환하게 될 것임.

■ **TTIP에 의해 자유무역 협상이 가속화될 두 번째 후보는 동아시아 지역일 것임.**

- 동북아 FTA 또는 ASEAN이 주도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가장 유력한 후보.

② 다자간 무역협상의 자극 또는 무력화

■ **TTIP에 의해 개방의 폭이 확대되고 교역 규범이 개선되면, TTIP가 다자간무역협상 노력을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과 다자간무역협상을 더욱 약체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섬.**

③ 서방 경제권의 재부상

■ **TTIP의 타결은 글로벌 경제 및 외교 사회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제 1 경제권의 부상을 의미함. 종래 선진경제권의 주도권이 장기적으로 쇠퇴되어 온 지난 수십 년의 추세가 반전됨을 의미함.**

- 또한 환대서양 경제권의 경제통합은, 서방이 지향하는 바 글로벌 경제의 향방에 따라 신흥국의 부흥이 통제된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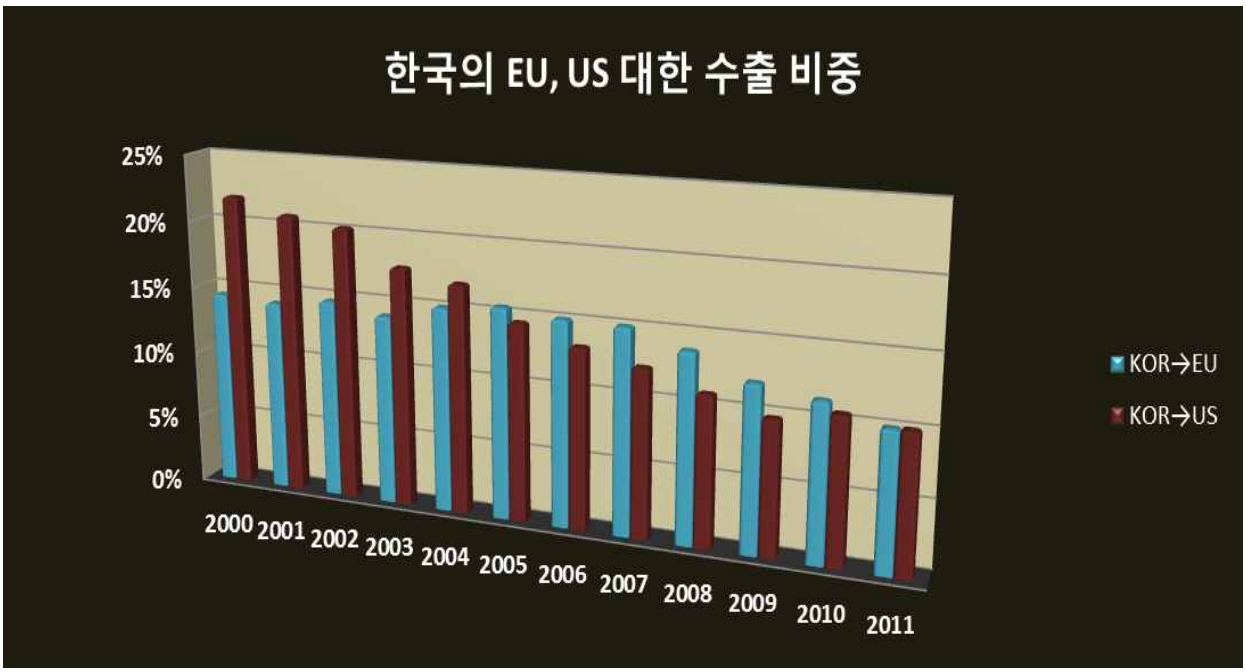
④ 글로벌 경제규범의 강화

■ **TTIP를 협상을 통해, 미국과 EU는 세계경제의 여타 주체들도 따르게 될 글로벌 경제규범을 주도적으로 할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음.**

- TTIP는 '서방이 자유로운 국제경제질서의 보존에 진력할 것이며 또 새 글로벌 경제의 톤(tone 규범과 체제)를 정할 것이라는 강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임.
- 경쟁정책, 국산화 정책, 중소기업정책 등에 관한 TTIP의 협상은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신흥국의 경제정책이 향후 (정부) 비간섭과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규범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검증될 것을 예고.

6.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사점

『교역과 투자』



■ **TTIP는 고전적인 무역전환효과를 가질 것임. 역외국은 미국이나 EU에 비해 불리해 질 수 밖에 없음.**

- 한국은 미국과 EU와 공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발효된 상태임. 따라서, TTIP가 체결되고 발효될 때까지는 TTIP 지역에 대한 상대적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임.
- TTIP 발효 후에는, 한국이 TTIP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대적 경쟁우위는 완전 해소될 것임.

■ **이는 한국에게, 새 시장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두 과제를 안겨주고 있음.**

『교역관련 글로벌 규범』

■ **한국에 대해, TTIP의 무역전환 효과보다 그 협상 과정에서 수립될 새로운 국제교역의 규범이 더 심대한 도전일 것임. 이는 한국의 많은 국내정책이 새로운 국제교역규범, 특히 대외경제정책의 새로운 표준(Norms)과 상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재벌규제와 중소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의 공정거래제도는, 불공정 및 비경쟁적 상관행의 엄격한 규제가 그 핵심인 선진국의 경쟁정책과 충돌 가능성이 높음.
- 금융지원과 보호를 중심적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신성장전략은, 바로 미국과 EU가 외국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 국산화 정책임.

- 금융지원과 국내외 경쟁(국내 대기업과 해외기업의 경쟁)으로부터의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또한 (정부 개입의 배제, 산업별 중립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서방 선진경제권의 중소기업정책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TTIP의 글로벌 교역규범 제정은, 한국의 정책방향에 관한 양자택일의 선택 과제를 안겨줄 것임. 한국에게 여타 경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한국 나름의 교역규범을 제정하든가, 아니면 TTIP 지역이 제정할 글로벌 교역규범에 상응하도록 한국의 경제정책을 개선해야 함.**

7. 한국의 대응

■ **TTIP 없이도, 한국경제 여건은 글로벌 시장 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저성장과 고실업의 부담을 안고 있고, 신흥국에 의해 자신의 국제경쟁력 기반에 심대한 도전을 받고 있음.
- 국제경쟁력 기반의 약화는 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성장의 원천의 발굴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성장전략의 추진은 아직도 부진한 상태임.
- 또 고령화 등 한국 경제가 새롭게 맞이한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상황도 아님.

『글로벌 기준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루기 위한 부담은 향후 정부보다는 민간기업이 져야 할 것임.**

- 정부의 재정적 입지가 취약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과 개입을 통한 국내산업 육성을 현존 또는 향후 글로벌 규범이 엄격한 규제할 것이기 때문임.

-- **정부가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내외 여타기업에 대한 차별성이 배제되는 방식과 정책수단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FTA에 대한 전향적 입장』

■ **TTIP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한국기업의 교역기회의 확대와 특히 시장개방협상의 추진일 것임.**

- DDA 협상이 좌초된 상태에서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한국정부에 열려 있는 유일한 선택은 FTA 등 쌍무적 무역자유화의 추진임.

최근 한국 정부는 FTA 등 무역자유화 협상에 관해, 한국을 향한 협상 제안을 경시하거나, 진행 중인 협상에서 과거와는 달리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한국이 '아시아의 FTA Hub'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음.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FTA 협정을 맺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는 미국이나 EU 등 거대경제와 FTA를 맺은 것은 한국뿐이라는 사실에 안주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임.
- 둘째, 'FTA 피곤증' 현상을 보이고 있음. 주요 FTA 협상을 추진할 때마다 경제사회적 분란이 야기되고 그 해소에 막대한 경제 및 정치적 자원을 투입해 온 한국정부로서는, 새로운 중요한 FTA를 추진할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태.
- 이러한 한국정부의 미온적 입장에 TTIP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 셈임.

『동북아 FTA 추진 가속화』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한정하더라도, 한중FTA, 한일FTA, RCEP, TPP 등 한국이 추진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FTA는 산재해 있음.**

- 관련국들로부터의 FTA 참여 요청에 한국은 지금까지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호응해야 할 것이고,
- 미참여 FTA의 무역전환효과를 극소화하고 참여 FTA의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으로 가능한 한 다수의 나라와 FTA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모든 FTA가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고 있음. 그들 중에 TTIP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장점을 가진 것이 동북아 FTA로 판단됨.

■ **첫째, 동북아 3국은 동일한 지경학적(geo-economic) 우려를 가지고 있음. 3국 공히, TTIP와 같은 경제블록으로의 움직임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3국 공히 환대서양 양안 경제권의 시장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새로운 시장의 확보를 통한 TTIP에 대한 대응은, 미국과 EU와 FTA협정을 맺고 있는 한국보다 중국과 일본에 더 절실한 과제임.
- 이에, 글로벌 교역 1위, 3위 그리고 8위의 동북아 3국이 FTA로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진다면, 지구경제의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거대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임. TTIP처럼, 동북아 FTA는 글로벌 경제의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의 등장을 의미함.

■ **둘째, 경제체제와 관련해, 동북아 3국은 환대서양 경제권과는 상이한 체제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

-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을 포함해)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동북아 3국은 서방 경제권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규범과 기준에 따라 동북아 3국의 경제정책과 체제가 괄목하게 변화 내지 개선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개입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환대서양 경제체제와의 차이를 부인하기 힘들 것임.
-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북아 경제체제와 환대서양 경제체제 간의 차이는 더욱 확대될 소지도 큼.

■ **따라서 동북아 3국이 TTIP에 의해 제정될 새로운 글로벌 기준(Norm)에 대한 적응이 강요되기 전에, 동북아 FTA를 통해 아시아 경제체제의 기준을 서방의 글로벌 기준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임.**